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 앞두고 '전국 교육연대' 구축

교육청 'K-민주주의 교육' 비전 선포

전국 교육 연대망 등 4대 추진 과제 발표

義역사 체험벨트·미발굴 유공자 서훈 신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작업 본격화

김대중 교육감 "선양·교육 사업 지속 추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K-민주주의 교육 비전 선포식을 열고 4대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20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전국 교육연대 구축에 나선다.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2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K-민주주의 교육 비전 선포식'을 열고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4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4대 추진 과제는 ▲2029년 100주년 전국 교육연대망 구축 ▲발상지 학교와 현장을 잇는 '의(義) 역사 체험벨트' 구축 ▲320개교 네트워크 및 미발굴 유공자 국가 서훈 신청 ▲'K-민주주의 전당' 건립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교육·기념사업이다.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역사학계·집필진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

100주년인 2029년에는 전국 청소년이 참여하는 '학생독립운동 100주년 선언문'을 공동 선포하고 '전국 청소년 평화·독립 문화제'를 개최한다. 민·관·학 '학생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의 범정부 차원 국가 추진위원회로의 확대도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이 AI·증강현실(AR) 등 실감형 콘텐츠를 통해 학생독립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체험하고 토론과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오는 12월 '민주주의역사누리터'를 개관한다. 이를 출발점 삼아 일제 군사시설 유적 화정동굴-학생독립운동기념관 등 3개 거점을 잇는 '전남광주 의(義) 역사 체험벨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옛 나주역·광주역 터, 광주제일고·전남여고·광주자연과학고, 목상고·여수서초 등 전남광주 지역 항일운동 관련 유적과 학교를 잇는 '의 역사 탐방로'도 구축하고 교육 과정과 연계해 현장 탐방과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국내외 320개 학교와 연대해 '학생독립운동 학교별 역사 배움자료'를 배포하고 '학생독립운동 의(義) 선배 명예졸업장' 추서를 확대한다. 이들 학교에는 '1929 항일 배움터' 현판을 설치해 교실 속 배움을 계승한다.

올해 8월15일 미서훈 학생 독립운동가 100명에 대한 서훈을 국가보훈부에 신청했던 것에 이어, 관련 사료를 추가 발굴해 서훈 신청을 이어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을 보존하고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K-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한다. 전당에는 학생독립운동 참여자 4천723명의 명단과 언론 보도 기록 2만4천여건 등을 담은 '디지털 역사교육 아카이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남북 공동 등재까지 모색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선포식 후 5·18민주화운동 시민군 출신인 김상집 역사 기록 화가로부터 항일 학생 비밀결사 '성진회' 구성원들의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한 그림을 기증받았다. 이어 광주제일고·전남여고·광주자연과학고를 방문해 기념탑, 여학도기념비, 송홍 선생 흉상 등을 참배하며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독립운동은 3·1운동, 6·10만세운동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독립운동이지만 역사적 의의에 비해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다"며 "1회성 기념행사를 넘어 지속적인 선양과 교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여순사건 희생자 심사·유족 지원 '입법 속도'

개정안 3건 국회 발의…제도 개선 등 박차

유족단체 지원 근거 마련·권익 보호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유족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선다.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이 국회에 발의된 것을 계기로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는 한편, 추가 신고기간 마련 등 남은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2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월13일과 28일 잇따라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은 희생자·유족 심사 과정에서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단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전남광주시는 그동안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국회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1건을, 주철현 국회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조계원·권향엽 국회의원 등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앙위원회가 희생자·유족 조사 과정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정보 확인이 수월해져 조사와 심사 기간을 줄이고 결정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국유재산 특례 적용의 근거 법률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여순사건 유족단체의 제도적 지원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유족 권익 보호와 추모·기념사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남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이달 초 국회를 찾아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신고기간 마련과 후유장애를 겪다 숨진 사람에 대한 희생자 인정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달 말에는 전문가와 유족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여순사건 특별법의 추가 개정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최명진 기자

전남광주시, 450억 투입 車 부품 재제조 기반 갖춘다

산업부 공모 선정…국비 99억원 확보

2030년까지 에너지밸리산단에 조성

순환경제혁신센터 설립·핵심장비 도입

지역 기업 기술 개발·시장 진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자동차 부품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시험인증 기반시설 구축에 나선다.

2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99억원을 확보했다.

전남광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450억원을 투입해 남구 에너지밸리산단에 자동차 사용 후 부품 재제조 생산시설과 시험·평가·인증 장비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투자를 유치해 특수목적법인(SPC)과 사업을 연계 추진해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관 기관은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며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가 참여 기관으로 함께 한다.

각 기관은 재제조 기술 개발과 시험·인증 장비 구축,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당한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혁신센터 설립 ▲부품 분해·세척·검사·품질인증 등 핵심 장비 14종 도입 ▲재제조 기술 상담(컨설팅) 및 시험·인증 지원 ▲온·오프라인 판매 개척 지원 ▲재제조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이를 통해 사용 후 부품의 수거부터 재제조, 품질 확인, 인증, 판매, 회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재사용 부품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부품기업이 재제조 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와 전장부품 등 미래차 핵심부품 분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 기업의 미래차 산업 전환과 국내외 신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전남광주시는 완성차 생산 기반과 다수의 부품 협력업체가 집적화된 강점을 지니고 있다.

기존 미래차 시험·인증 시설 및 연구기반시설을 이번 사업과 연계하면 자동차의 생산부터 운행, 부품 재제조, 재사용·재활용까지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완성차 제조사와 정비업체, 물류업체 등 지역 내 관련 산업 간 연계를 통해 부품의 순환 구조를 다지고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특히 부품의 진단·분해·수리·검사 등 다양한 공정이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박정환 AI모빌리티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전남광주시가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재제조와 품질인증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미래차 신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봉황면 만봉리 소재 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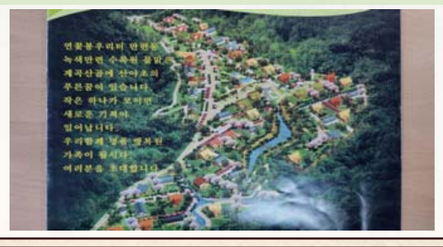
1 매물목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봉황면 만봉리 소재)

구 분	지 번	지 목	면 적 ㎡	면 적 평	가 격	상세내용
한 옥	514-31 (만년동길 84-13)	대 지	1,422	431	4억원	✓ 고급목재 사용 고품격 한옥 ✓ 덕룡산(용이 승천) 산세 수려 ✓ 유명 낚시터 인접
		주 택	109	33		
		사 랑 채	21	6.4		
대 지 이동식 건 물	510-43	대 지	1,055	320	1억원 6천만원	✓ 환매분으로 전원마을 중앙위치 ✓ 이동식 건물 사랑채 활용 可
		이 동 식 건 물	35	11		
미분양 대 지	510-69 外 3필지	대 지	1,000	303	1억원 2천만원	✓ 국유지 불하로 분양지연된 마지막 잔여매물
	508-35	생활근린 시설용지	606	184	1억원	✓ 한방치료(요양) 시설 적합 ✓ 공원부지(약 1천평) 인접, 활용 可
임 야	산 247	임 야 (휴양림)	19,545	5,923	평당 2만원	✓ 편백식재 5년차(국가 지원) ✓ 임도, 전기 및 수도시설 완비
	산214-13 外 5필지	임 야 (조경수)	39,872	12,082	평당 2만원	✓ 98년 산림경영승인, 임업직불금 수령 ✓ 조경수(적송) 재배, 판매중
과수원	산 245-6	임 야	6,369	1,930	평당 5만원	✓ 단감(월추) 5년생 : 250주 ✓ 농업직불금 수령
	산245-8 外 1필지	임 야	10,049	3,045	평당 5만원	✓ 단감(태추) 5년생 : 200주 ✓ 감(대봉) 300주 단감(태추)로 수종갱신중 ✓ 5평 농막, 급수시설 완료, 농업직불금 수령

2 매물소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봉황면 만봉리 소재)

① 마을전경

분양당시 홍보자료



만련전원마을 항공사진



② 한옥 [만봉리 514-31, 만년동길 84-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한옥 매매
(나주시 봉황면 만년동길 84-13)

- 대지 : 1,422㎡ · 본채 109㎡ / 사랑채 21㎡
- 광주전남혁신도시 및 KTX 나주역 20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확정된 광주공항 차로 30분
- 에너지국가산업단지 등 초대형 국책사업 인근 부지 확정
- 49세대 전원주택단지로 기반시설 완비
- 최고급 목재로 지은 한옥, 사랑채/정자(2개)/저온저장고 등 전원생활 시설완비
- 귀농, 귀촌 전원생활 최적
- 만봉리 산 245-8 외 1필지 과수원 10,049㎡ 동반매매(별도가능) 약 1.5억원 매(평당5만원), 동 과수원은 인기품종 단감(태추) 5년생으로 수확 시작, 급수/전기/수도 완비 및 관리사 1동 설치

매매가 4억원 주인 직거래

③ 대지(이동식건물 포함) [만봉리 510-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전원주택 부지매매

광주전남혁신도시 및 KTX 나주역 20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부지확정된 광주공항 차로 30분

- 대지 1,055㎡ 연 35㎡
- 이동식 주택 설치되어 있음
- 넓은 텃밭에 과일, 채소 등 재배로 여유로운 전원생활 가능
-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완비
- 주택 신축시 장기저리 융자 가능 (1세대 2주택 미해당)
- 에너지국가산업단지 등 초대형 국책사업 인근 부지 확정

매매가 1억 6천 주인 직거래

만련전원마을 추진위원장 H.P 010-8949-9376